



보도 일시	2023. 1. 19.(목) 14:30	배포 일시	2023. 1. 18.(수) 14:30
담당 부서 <총괄>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장 박일훈 (044-202-740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종범 (044-202-7410)

농식품부-고용부, 농업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 체결

- 도시(都市)-농촌(農村) 상생으로 농촌일손 문제 해결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1월 19일 경상북도 문경시 농작업 현장에서 농업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붙임 1)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붙임 2)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사업 추진배경 및 세부내용 (붙임 3) 업무협약서

- 이 자리에는 양 부처 장관 외에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신현국 문경시장, 임이자 국회의원, 현장 농업인 등이 참석하여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지원을 약속하였다.
- 업무협약식 후에는 양 부처 장관 등 주요인사들이 문경 거점산지유통센터 현장과 시설채소 재배현장을 둘러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1. 19.(목) 14:30 ~ 16:45

경북 문경시(대구경북농금농협 문경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 주요내용: 업무협약 체결 → 현장 간담회 → 문경 농작업 현장 방문

◆ 주요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황근), 고용노동부 장관(이정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김학홍), 문경시 시장(신현국), 국회의원 임이자 등

- 최근 농업생산과 농업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촌일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22.11월, 통계청): 농림어업 52.9%(전 산업 11.7%)

- 한편, 그간 농업일자리 사업은 기관 간, 지역 간 연계 없이 단절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인난 해결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더하여 근무 여건·환경 등도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

* 농식품부-고용부 간, 광역-기초단체 간, 농촌-도시 간 각각 단절 시행

- 이에 농식품부와 고용부는 각 부처별로 시행되어 왔던 농업일자리 사업을 연계, '국가기관 간 협업(協業)', '도농(都農) 상생', '일자리 구조개선(構造改善)'을 기본체제로 하여 범정부 협업사업을 마련·시행하기로 하였다.

* '23년 사업비(잠정, 총 118억): 고용부 40억, 농식품부 34억, 경북·전북(지방비) 44억

- 동 사업은 도시지역 주민을 농업취업자로 발굴하여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큰 특징이 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체) 농식품부, 고용부, 자치단체 등 농업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이 함께 「농업일자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운영) 농촌에 더해, 도시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취업자를 발굴한다. 또한 도시 비경제활동 인구를 집중적으로 구인할 계획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유입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국인의 농업 일자리 취업 및 농촌 정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22.12월 기준,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36.7%
(경제활동인구 63.3%, 취업자 61.3%, 실업자 1.9%)

- (지원) 취업자에게 교통편의·숙박비·식비·작업교육 등을 지원하며, 안전교육, 상해보험료 및 보호장비를 제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도입, 취업자 권익보호도 제고한다.

- (관리) 농업일자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작업, 구인·구직 정보 등을 공유하고, 취업알선과 함께 근로계약 체결까지 지원한다.
- (지역) 올해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대상으로 추진하고, '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이번 협업사업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력 확대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을 확보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기존 계절근로의 단점을 보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확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업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고용부 그리고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하며, “이번 협업사업은 구인난 개선이라는 직접적 목적과 함께, 국가기관 간 「협업」, 도시-농촌 간 「상생」 및 일자리 「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가치의 실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 한편, 양 부처 장관은 한목소리로 “이번 협업사업으로 농업 일자리가 활성화되면 농촌인구가 증가하고 농촌이 발전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사업의 의의를 거듭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일훈 (044-202-7404)
		담당자	사무관	신종범 (044-202-7410)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덕민 (044-201-1711)
		담당자	사무관	김동일 (044-201-1721)

都-農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농식품부 - 고용부 업무협약식 개요

□ 행사 개요

-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고용부-농식품부-자치단체 협업사업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양 부처간 업무협약 체결

□ 행사 내용(안)

- 일시: '23. 1. 19(목) 14:30~16:45
- 장소: 경북 문경시(1부 거점산지유통센터*, 2부 시설채소 재배현장)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7길 52

- 참석자: 고용부장관, 농식품부 장관, 임이자 국회의원, 경북도 행정부지사, 문경시장, 농업 관계자(8명, 유관기관·농업인) 등

- 주요내용: 농식품부-고용부 업무협약* 체결, 현장간담회 및 현장시찰

* ① 농업 일자리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② 농업 일자리 온라인 시스템(공동 DB 등) 구축
③ 현장 맞춤형 농업 일자리 취업서비스 강화(도시인력 구인 및 현장맞춤 지원 강화)

- 행사 일정: 업무협약식 → 현장간담회 → 현장시찰

시 간	주요 일정
14:30~15:55 (85')	<p>[1부] 업무협약식 및 현장간담회</p> <p>① 업무협약식(3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씀: 양 부처 장관, 경북부지사, 문경시장, 임이자 국회의원 ▶ 추진배경 및 협약내용 설명(PPT) ▶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p>② 현장간담회(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력 수요 및 공급 방안 등 <p>③ 문경 거점유통센터 시찰 및 격려(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경 유통센터 설명 및 사과 선별·포장 시연
15:55~16:2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으로 이동
16:25~16:45 (20')	<p>[2부] 시설채소 재배 현장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샐러드용 유럽채소 재배 및 수확현장, 농가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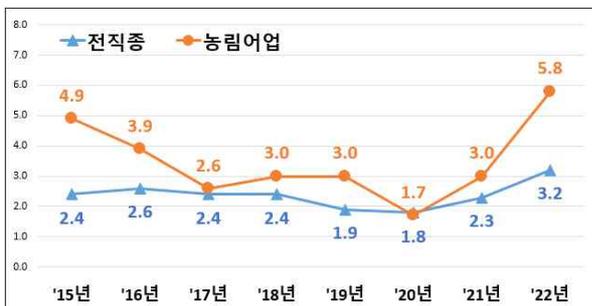
1. 농번기 일손부족 현황

□ 농업생산 증가 등으로 인력 수요는 증가 추세이나, 농촌 일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인력부족률('22.상반기): 농림어업은 5.8%로 전산업 평균(3.2%) 대비 약 2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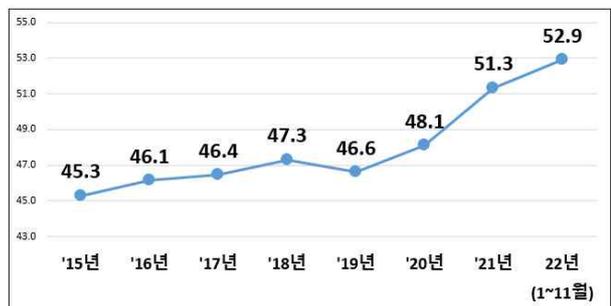
○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22.11월): 농림어업은 52.9%로 전산업 평균(11.7%)의 4.5배

< 농림어업 인력부족률(% 5인 이상, 상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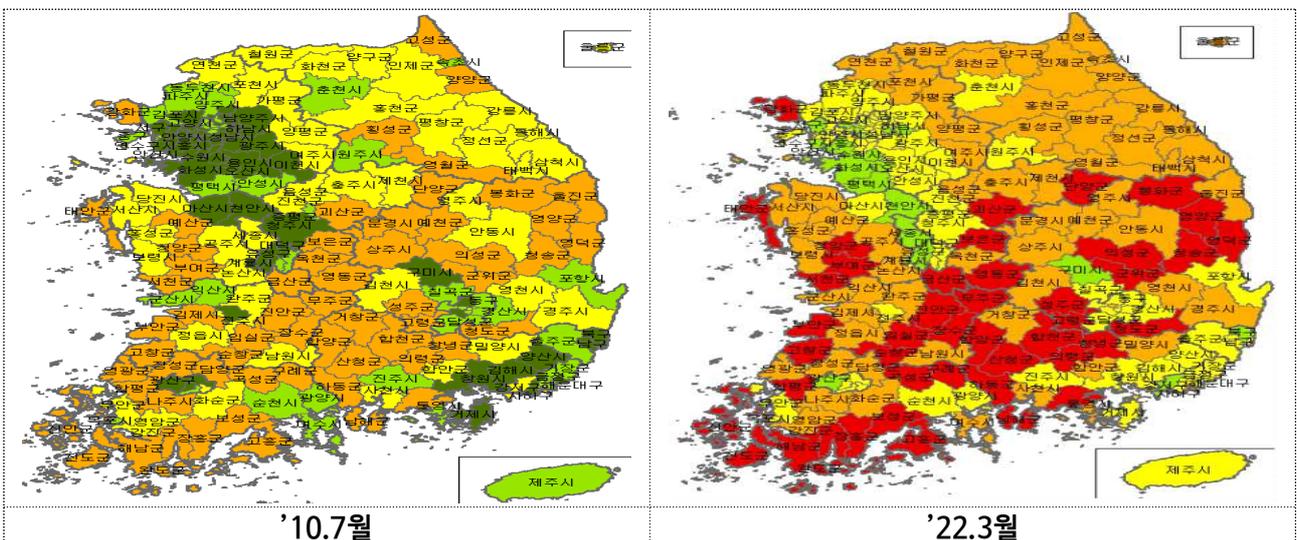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 농림어업 고령자(65세이상) 비중 추이(%) >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로 농번기 구인난 지속 심화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각 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2. 3월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활용

주: 1) 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함.

2) ■ 소멸 저위험, ■ 정상, ■ 소멸주의, ■ 소멸위험진입, ■ 소멸 고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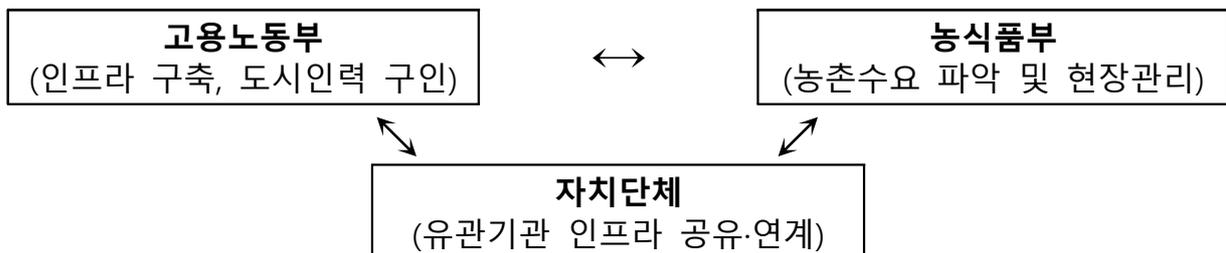
II. 농식품부-고용부 협업사업 기본 방향

- 작년 고용부가 시범 운영한 「都-農 연계 농업 구인난 개선사업」(참고) 체계에 농식품부 사업을 연계, **범정부 농업 일자리사업**으로 체계화
- 국가기관간 협업, 도시-농촌 상생, 농업일자리 구조개선을 3가지 큰 틀로 농업일자리 사업 개편
 - (협업) 정부-자치단체 공동으로 「**농업 일자리지원 협의체**」를 구성, 체계적인 구직수요 파악 및 초광역 단위의 광범위한 구인활동
 - 지역별 협의체가 연계, '**범정부 농업일자리 네트워크**' 조성
 - (상생) 농촌은 물론, 인근 도시지역에서도 구인, 농업일자리로 알선
 - 농촌의 부족한 일손 충원 ↔ 도시의 실업문제 해결 (Win-Win 모델)
 - (구조개선) 안전한 일터(교육·장비·보험 등), 취업자 권익보호(근로계약 체결), 근무여건 개선(교통비·식비·숙박비 등) 등 현장지원 강화
 -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개발, **일자리 정보 제공 - 구인·구직 신청 - 취업알선 - 근로계약 체결**까지 One-Stop 지원

III. 농식품부-고용부 협업사업 세부 추진 방안

1. 농업 일자리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 광역단체 주관으로 고용부(지방관서) - 농식품부(농촌인력중개센터) - 기초단체 - 유관기관간 「**농업 일자리지원 협의체**」 구축, 공동사업 추진
- 각 기관 협의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고, 각 기관 보유 인프라 및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공유·연계



2. 농업 일자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 (“23년) 고용부의 농업일자리 온라인 정보시스템(‘농가일모아’)을 확대·개편하고, 농식품부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공동 운영하며 연계 추진
 - 공동 DB를 구축, 구인농가 정보(필요인력, 작업내용, 근로조건 등), 구직자 정보(희망 근무지역, 작업내용·기간 등), 구인-구직 알선 정보 공유
 - 전자근로계약 서비스를 탑재, 온라인 근로계약 체결 지원
 - 교통편의, 숙박시설, 농가 및 작업 정보 등 농촌현장 정보 제공
- (“24년 이후) ‘농가일모아’를 농식품부 「도농인력중개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전국단위 인력 관리하며, 정보 공유 및 채용서비스 제공

3. 도시지역 주민 중심의 인력 구인

- 도시 거주 비경제활동인구를 주요대상으로 초광역 단위 농업인력 구인
- 도시 민간조직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활동을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여 통해 도시 인력 대상 구인 강화
 - 부녀회, 아파트 입주자회의, 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주부·청년 자원봉사단 등을 직접 방문하여 농업인력 발굴
 - 특히, 고용부 중장년 취업지원기관, 광역 자치단체 일자리센터를 통해 도시주민 구인 강화

4. 농촌 수요파악 및 농촌인력 중심 구인

- 농식품부 농촌 인프라를 활용하여 구인농가의 필요인력 산출하고,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참여기관과 연계하여 농가 취업알선 강화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수요조사 및 농가별 작업반 구성
 - * '18년 50개소 → '20년 92개소 → '23년 170개소
- 영농작업반 등 기존 농업 근로자 및 농촌지역 인력 중심으로 구인

5. 현장 지원

- **교통편의**(차량 또는 교통비), **숙박비**(숙소 임차비), **식비·간식비** 등 제공, 근무여건 개선
- **상해보험료, 안전장비** 등 제공하고, 도시주민·비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작업 기술 및 안전 교육** 집중 실시, **안전한 일터** 조성
- '농가일모아'를 통한 **온라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근로조건 명확화 및 **취업자 권익보호 강화**

< 도-농 상생 농업 일자리사업의 정책적 의의 >



都 - 農 **상생 농업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노동부 업무협약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라 한다)는 농업 인력부족 문제 해결과 일자리 활성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부처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농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고용부 협업사업」을 마련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양 부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1.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역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농업 일자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총괄 추진·관리토록 한다.
2. 구인·구직 정보, 농작업 및 농촌 인프라 정보 등을 공유하고 취업 알선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3. 농촌 및 인근 도시 주민들이 농업 일자리에 적극 취업할 수 있도록, 초광역 단위 구인 등 적극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4. 농작업 근무여건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한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5. 자치단체가 협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활성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 부처는 자치단체 지원을 강화한다.
6. 기타 농업 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

제3조(정보교환) 양 부처는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부처는 업무협력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협약의 목적 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본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5조(협약서의 효력) ①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은 양 부처의 합의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통보가 있는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상실한다.

제6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이행과정에서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양 부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협약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부처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양 부처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